

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

김 교 성⁺

(중앙대학교)

김 윤 민⁺⁺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제어: 복지태도,눔프, 복지태도의 이중성, 복지제도의 불평등 구조

* 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5612).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동일성과 차이'의 정치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쟁부터 최근에 단행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무상급식 논쟁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확대되며, 해게모니 획득을 위한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로 비화되었다.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편과정은 소득계층과 세대 간 차별화된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²⁾ 맞춤형 보육정책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 사회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통합의 가치보다 '갈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갈등 형성과정에서 부각된 복지제도의 계층, 젠더, 세대 간 상충된 이해관계는 '분열'이라는 새로운 상처를 남기며,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회의적인 시각은 가속화되고 있다.³⁾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들은 복지확대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눅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우리 사회의 복지확대를 저해하는 복지태도로 인식되었고(우아영, 2000; 최균·류진석, 2000; 김영순·여유진, 2011),⁴⁾ 주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은 확대되었다.⁵⁾ 최근에는 복지태도의 비밀관성(김영순·여유진, 2011)과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연구(김사현,

- 1)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은 증세가 수반되는 복지정책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당은 무상복지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차별 없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논쟁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넘어 담론정치의 모습이 포착된다(윤찬영, 2010).
- 2) 미래 세대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되면서 젊은 세대의 반발이 확대되었다. 일부 시민단체의 과장된 문제제기와 언론의 '부풀리기'식 보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극단에 이르게 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김상호, 2007: 38).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의 차등화 방안이 채택되면서,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었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김연명, 2013).
- 3)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활용하고 심지어 조장하여 이념적·정책적 노선을 함께 하는 지지집단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 4) 증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저항은 복지정책의 자원 확대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여(김희연·이재광·최석현·최영기, 2013: 6) 복지국가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 복지는 좋지만 내 지갑은 안돼.. '눅프' 주의보(조선일보, 2013년 2월 5일), [설왕설래] '눅프'(세계일보, 2013년 1월 27일), 김 차장, 당신은 눅프입니까: 복지는 좋는데 세금은 싫다(서울신문, 2013년 1월 26일).

2015)가 진행되어 늑프현상의 실재를 증명하고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다만 계급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계급적 요인(젠더, 연령, 세대 등)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거나, 비용회피형 복지태도와 더불어 '복지확대는 반대하지만 증세는 찬성'하는 비용지지적 불일치 현상을 포괄하여 늑프현상의 심각성이 반감되고 논의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된 한계를 보완하고, 늑프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늑프현상의 '실태'와 늑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늑프현상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⁷⁾와 늑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복지제도는 건강정책, 연금, 주거정책, 고용정책, 빈곤정책,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등이다.

2. 이론적 논의

1) 복지태도와 늑프현상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복지태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김영순·여유진, 2011: 212).⁸⁾ 일찍이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검증되며(Rimlinger, 1971;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재인용) 복지태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Bonoli, 2010: 433).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주요 선거에서 사회복지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양재진·민효상, 2013),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형신, 2012). 특히

6) 학술적인 차원에서 늑프현상은 주로 복지태도의 이중성 혹은 불일치로 설명된다. 이중성과 불일치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련 연구들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사현(2015)을 참고하라.

7) 복지제도가 특정계층과 계급에게 유리한 분배정책을 수행하며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Marshall, 1963; Titmuss, 1976)은 복지제도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주장의 핵심은 계층, 직업, 고용상태, 지역, 세대, 성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가 복지제도에 내재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계층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Ferrera, 2010).

8)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을 의미하는 용어는 복지'의식'과 복지'태도'가 병용되고 있다. 두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전자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구성원의 마음의 내용을 의미하고(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후자는 실제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참여, 그리고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을 의미한다(류진석, 2004; 김영순·여유진, 2011; 이한나·이미라, 2011; 김수정, 2014; 김사현, 2015). 분석의 용이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행동성향을 의미하는 복지'태도'가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으로 이해된다(노대명·전지현, 2011: 36-38).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이 주요 논쟁으로 부상하면서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류만희·최영, 2009; 노대명·전지현, 2011; 배진희·신정관, 2014).

복지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은 계층(계급)이 복지정책의 중요한 실천주체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시각의 연구(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신광영 외, 2003)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을 적용하여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조돈문, 2001; 류만희·최영, 2009; 함철호·이중섭, 2010; 김수정, 2014; 김윤태·서재욱, 2014)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라도 특정 복지제도와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안상훈, 2000; 류진석, 2004) 혹은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로 요약할 수 있다(우아영, 2000; 최균·류진석, 2000; 이한나·이미라, 2011;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양재진·민효상, 2013).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발전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해소의 단서를 제공한다(김윤태 외, 2013).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발전의 상관성을 고려했을 때, 복지태도 불일치의 완화가 복지제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태도가 정치적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배진희·신정관, 2014), 복지태도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다.⁹⁾ 다소 제한적이지만 뚝뚝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등장하며(김영순·여유진, 2011; 김사현, 2015), 서구에서 1980년대부터 논의된 세금 인하와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동시에 갈망하는 복지태도의 '표면적 역설'(Welch, 1985: 310)이 우리 사회에도 실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젠더와 연령, 그리고 정부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가 복지태도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고(김사현, 2015),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복지국가 확대에 불리한 부정적인 징후들로 해석되었다(김영순·여유진, 2011).¹⁰⁾

9) 우리 사회의 비일관적인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학문적 차원의 관심보다 더욱 강력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은 복지태도에 존재하는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비일관적 태도를 뚝뚝현상으로 규정하고,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뚝뚝현상'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언론의 칼럼과 기사에도 자주 등장하였으며,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복지확대 속 뚝뚝현상'이 포함되기도 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국립국어원(2014)에서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비용 형성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의미하는 '뚝뚝족'을 신어로 채택하고, 이러한 태도를 뚝뚝현상으로 소개하였다.

10) 복지제도의 비일관성이 복지국가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가 정치적 선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Alesina and Rodrik, 1994: 485). 복지확대에 증세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기조로는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택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구성원들의 비일관된 복지태도를 정책기조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는 확대하되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되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현 정부는 -뚝뚝현상으로 설명되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를 반영하듯이- 대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주장하였다. 다수의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졌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의 의지는 집권 이후에도 '표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재원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이 가시화되고,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 증세가 시행되었으며, 복지확대는 고사하고 복지정책의 축소

2) 복지태도의 형성과 계층, 젠더, 연령

본 장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천주체로 강조되고 있는 '계층'과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젠더', 그리고 최근 주요 복지제도의 논의과정에서 차별화된 입장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연령'(세대)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 과정에 복지태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급경험, 복지체감 정도,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 등도 포함하였다.

(1) 복지태도와 계층

계층과 계급은 경제적·물질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두 개념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복지와 조세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며(김영순, 1996: 22), 조세부담과 복지비용의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Gough, 1990: 116). 계급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들로 규정되어 집단 내부의 동질성과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는 개념이라면, 계층은 층위나 서열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right, 1985; 김영순·여유진, 2011 재인용). 복지태도 연구에서 활용되는 계급 개념에는 생산관계에서의 위치가 강조되며, 계층 개념에는 소득 격차 등의 현상적 불평등이 부각된다(장귀연, 2013: 13). 일반적으로 계급의 측정을 위해 직업 또는 직종을 이용하고(김영순·여유진, 2011; Svallfors, 2004), 계층 측정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이 대리변수로 활용된다(주은선·백정미, 2007; 모지환·김행열, 2009; 김운태 외, 2013; 김사현, 2015).¹¹⁾ 계급과 계층이 내포하는 의미와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개념을 고려한 연구결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계층(계급)과 복지태도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고 혼선적인 양상을 보이며, 계층(계급)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연구(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김영순·여유진, 2011)와 계층(계급)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최영, 2009; Hansenfeld and Rafferty, 1989)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 제시된 복지태도의 계층(계급) 효과는 하위계층의 친복지적 성향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Hansenfeld and Rafferty, 1989; Gough, 1990).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상위계층은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반면, 저소득층 혹은 주관적 사회계급이

혹은 과거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2배 증액 공약은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등지급으로 축소되었으며,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은 보육제정에 대한 부담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증세만 있는 복지축소'가 발생되어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무력화됨에 따라, 님프현상의 완화가 복지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확인되고 있다.

11) 선행연구 중 계급을 활용한 연구는 우아영(2000), 조돈문(2001), 김영순·여유진(2011), Svallfors(1995) 등이며, 계층을 이용한 연구는 주은선·백정미(2007), 류만희·최영(2009), Hansenfeld and Rafferty(1989) 등이 있다.

낮은 집단일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전통적 가설(Svallfors, 1995)을 지지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중간층 혹은 고소득층의 복지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 국외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상균, 1994; 김영란, 1995; 류만희·최영, 2009). 하위계층도 복지제도를 통한 변화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기존질서, 정부, 정치, 재분배 정책, 세금 등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Derks, 2004: 517). 그러나 주은선·백정미(2007)의 연구는 우리 사회 하위계층의 강한 친복지적 성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탈계층(계급)적 측면이 부각되지만(안상훈, 2000; 김영순·여유진, 2011), 계층(계급)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Svallfors, 1995). 복지태도 연구에서 계층(계급)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2) 복지태도와 젠더

최근 복지제도의 젠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정, 2014).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젠더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의 특성과 시행되는 맥락을 고려하면 젠더 편향적 요소가 발견된다(류연규·황정임, 2008: 74).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계층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로 통제변수 또는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중 하나로 분석에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며, 두 변수 간 관계가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젠더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복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함철호·이중섭, 2010; Gough, 1990; Blekesaune and Quadagno, 2003)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친복지적인 성향이 낮다(조돈문, 2001)는 상반된 결과로 구분된다. 여성의 친복지적인 성향이 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먼저, 사적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를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자기이해'(self-interest)를 가질 수 있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425). 또한 남녀 간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배려하도록 사회화되어 자원(재)분배에 대한 지지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Svallfors, 1991: 622).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적인 특성을 가진 복지국가의 고용구조가 여성의 고용 증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수정, 2014;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반면, 여성의 친복지적 성향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제시한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 담당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견해에 반영되어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돈문, 2001: 176). 복지태도 연구에 젠더를 고려한 다수의 연구에서, 젠더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류만희·최영, 2009; 김운태·서재욱, 2014). 복지제도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젠더가 자기이해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근거이다.

(3) 복지태도와 연령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gener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거에서 세

대요인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분석의 핵심변수로 간주되고 있으며(이내영·정한울, 2013: 39), 세대별 투표결과와 이념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윤성이·이민규, 2014). 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 부각된 젊은 세대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문제와 노인 세대가 직면한 낮은 수준의 연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증폭되었고(김상호, 2007) 세대(연령)별 복지 인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대에 관한 논의는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사회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생애주기효과(life cycle effect)와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이들의 유사한 의식과 태도로 정치적 세대를 분류하는 코호트 효과(political cohort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황아란, 2009; 이내영·정한울, 2013).¹²⁾ 후자의 경우, 기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기보다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 변화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주장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연구자가 부여한 의미의 차이일 뿐, 조작화의 과정은 동일한 척도인 '연령' 또는 '출생연도'에 근거한다는 한계가 있다(황아란, 2009). 복지태도 연구에서 연령에 정치세대의 의미를 부여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함철호·이중섭, 2010),¹³⁾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대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모지환·김행열, 2009; 김윤태 외, 2013; 김수정, 2014; 김윤태·서재욱, 2014).

복지태도와 연령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층이 젊은층에 비해 복지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연구(류만희·최영, 2009; Hansensfeld and Rafferty, 1989)와 노인층이 젊은층에 비해 복지에 우호적이라는 상반된 결과(Blekesaune and Quadagno, 2003)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취약한 경제적 특성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인식되는 노인층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주은선·백정미, 2007).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 노인층의 높은 복지 욕구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를 예상할 수 있다. 노인층의 보수적인 이념 성향은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태도가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Gough, 1990).

(4) 그 외의 요인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계층에 비해 복지급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12) 생애주기효과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성숙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생활주기의 변화과정에서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 세대의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Erikson and Tedin, 2005: 136-137). 코호트는 성년 초기 혹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유사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이렇게 구축된 정치적 태도는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선형적 논리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지점이다(이내영·정한울, 2013; Tilley and Evans, 2014).

13) 정치세대에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에 대한 가정(박재홍, 2001)과 세대 간 차별성 및 세대 내 동질성이 전제된다(황아란, 2009: 195). 복지태도 연구에서 유일하게 세대를 적용한 함철호·이중섭(2010)의 연구는 정치세대를 산업화 세대(~1957년), 민주화 세대(1958년~1971년), 신세대(1972년~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있다(Svallfors, 2004: 119-120). 자기이해의 논거에 의하면, 복지제도의 수급자 혹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복지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아동이 있는 가정과 실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에 호의적이며, 노인들은 노인과 아픈 이들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 확대에 더욱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415-416). 이러한 가설은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혹은 수급가능성)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형성한다는 실증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최영, 2009).

복지체감도는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로 느끼는 정책 실행도와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신윤정·정경화·김수봉·손창균·이수형·이지혜, 2009: 34). 개인의 주관적 인지과정으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Hochberg, 1956; 최진욱, 2008: 102 재인용).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복지체감도를 평가하기도 한다(전준구, 2006: 121).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수록 신뢰가 확보되므로 제도에 대한 순응을 기대할 수 있다(최진욱,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도 의존적 신뢰는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므로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찬웅, 2006).

조세공평성은 조세수입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공정하게 집행되어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몫을 납부할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하며, 중세(heavy tax)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Martin and Gabay, 2012: 11). 복지확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므로(양재진·민효상, 2013; Bergman, 2002), 복지확대와 조세저항을 둘러싼 논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Duncan and Jones, 2003). 조세저항의 국가 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차이 발생의 원인은 복지체감과 조세공평성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에 있다(Martin and Gabay, 2012).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신뢰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¹⁴⁾ 복지확대를 저해하는 뉘프현상에 조세공평성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상기에서 고려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해석과 전략적 선택이 동일한 제도에 대한 다양한 행위 추구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Immergut, 1998). 복지태도 연구가 복지제도별로 시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

14)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응답(55.7%)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28.2%)보다 높게 나타나 낮은 신뢰도가 확인되고 있다(김희연 외, 2013: 3).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조사에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냐'는 질문이 있다. 2차조사(2007년)에서는 8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5차조사(2010년)에는 88.1%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8차조사(2013년) 자료이다.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자료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계층과 연령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의 사회복지 욕구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및 증세에 대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분석대상은 복지인식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총 4,113명이다.

2) 변수구성

연구의 종속변수는 ‘눅프현상’ 발생여부이다.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태도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눅프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부가조사에서 제시된 정책 영역 중 ① 건강정책(건강보험과 보건의), ② 연금, ③ 고용정책(고용보험과 실업대책), ④ 주거정책, ⑤ 빈곤층 생활지원, ⑥ 노인 생활지원, ⑦ 장애인 생활지원, ⑧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등의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 지출이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복지제도 ‘확대 찬성’, (복지수준) ‘유지’, ‘반대’의 세 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여 주요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였다. 증세에 대한 태도도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증세 찬성’, (조세수준) ‘유지’, ‘반대’의 세 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여 판단하였다. 두 가지 태도에 대해 <표 1>의 ‘복지확대와 (조세수준) 유지’(b 영역)와 ‘복지확대와 증세반대’(c 영역)를 눅프현상으로 조작화하였다. 특히 증세에 대한 견해는 ‘반대’와 ‘유지’의 두 경우를 모두 상정하였는데, ‘유지’(b)의 경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눅프현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⁵⁾

<표 1> 눅프현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

		증세		
		찬성	유지	반대
복지	확대	a	b	c
	유지	d	e	f
	축소	g	h	i

15) 한 문항으로 측정된 증세태도를 항목별 복지지출 태도와 교차하는 조작화 방식이 주요 복지제도의 정확한 눅프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자료 구성상 한계에 따른 선택이며, 김사현(2015)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계층, 젠더, 연령, 수급경험, 복지체감도,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수급경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복지체감도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자료 구성의 한계로 인해, 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문항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범주는 '매우 잘하고 있다'의 1점부터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의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는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조세공평성은 조세 신뢰수준에 대한 질문인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원 범주는 '매우 그렇다'부터 '그렇지 않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수준의 범주를 포괄(merge)하여, '신뢰', '보통', '불신'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내용 및 조작적 정의

영역	변수	측정내용 및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눔프현상 발생여부	주요 복지제도 확대에는 찬성하나 증세는 반대 혹은 유지에 응답 눔프현상 미발생 /눔프현상 발생(1)
	계층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독립 변수	젠더	남성 / 여성(1)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급경험	수급경험 있음 / 수급경험 없음(1)
	복지체감도	평균점수(점)
	조세공평성	조세공평성 낮음(불신), 보통, 조세공평성 높음(신뢰)

3) 분석방법

계층, 젠더, 연령에 따른눔프현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계층, 젠더, 연령 집단 간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눔프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여성의 비중(57.0%)이 남성(43.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은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46.7%)을 차지하고 있다. 30대~50대의 비중(12.1%~18.6%)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비중(5.8%)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평가는 '불신'한다는 응답(88.5%)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수준은 3.10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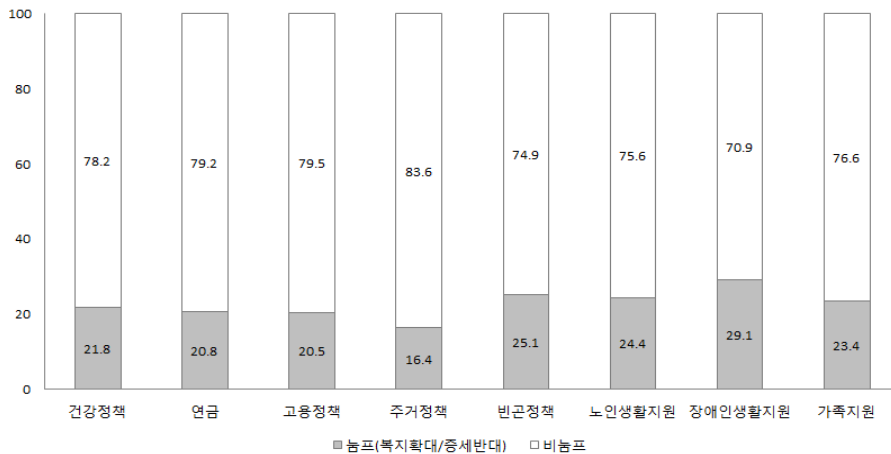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속성	빈도(비율)	변수명	속성	빈도(비율)
젠더	남성	1,768 (43.0)	소득계층	1분위	822 (20.0)
	여성	2,345 (57.0)		2분위	824 (20.0)
연령	20대 이하	237 (5.8)		3분위	821 (20.0)
	30대	498 (12.1)		4분위	823 (20.0)
	40대	766 (18.6)		5분위	823 (20.0)
	50대	693 (16.8)	조세공평성	불신	3,638 (88.5)
	60대 이상	1,919 (46.7)		보통	312 (7.6)
		신뢰		163 (4.0)	
복지체감	3.10 (평균점수)				

2)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님프현상 규모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님프현상의 규모는 <그림 1>과 같다. 주요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등에 대한 님프현상은 각각 21.8%, 20.8%, 20.5% 수준이다. 주거정책에 대한 님프현상 규모는 16.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빈곤층(25.1%), 노인(24.4%), 장애인(29.1%), 아동(23.4%)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정책의 님프현상 규모는 타 복지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은 복지지원을 받기에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제도지원에 따른 부정적 평가로부터 보호된 대상이다(Cook and Barrett, 1992).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회적 합의가 제도 확대를 위한 재정책을 지지하는 견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보다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 대한 님프현상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복지제도의 재원을 형성하는 납세자의 복지체감 증대방안 모색이 뭉프현상을 완화하는 선결 조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일관된 복지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소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김사현(2015)은 잔여적 복지를 선호하는 계층에서 비용 지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화 전략이 세입기반 조성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복지체감 수준이 증대되면 복지태도의 일관성도 증대될 것이므로, 보편적 복지논쟁이 복지확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재원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될 때, 뭉프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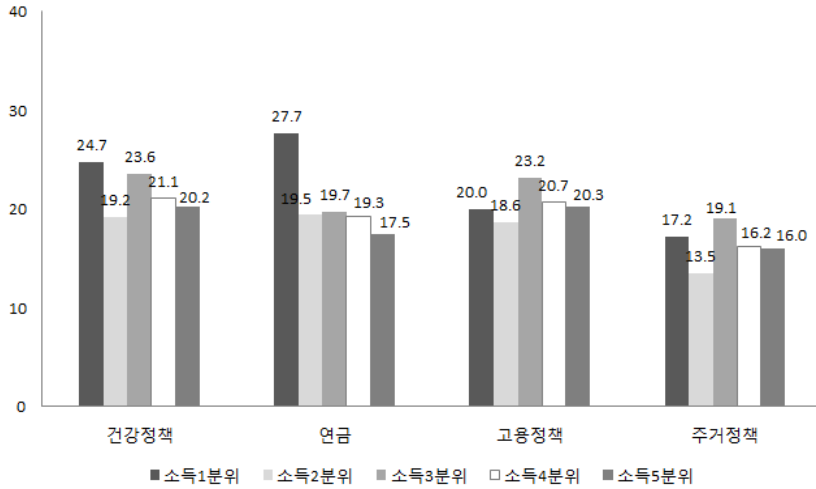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뭉프현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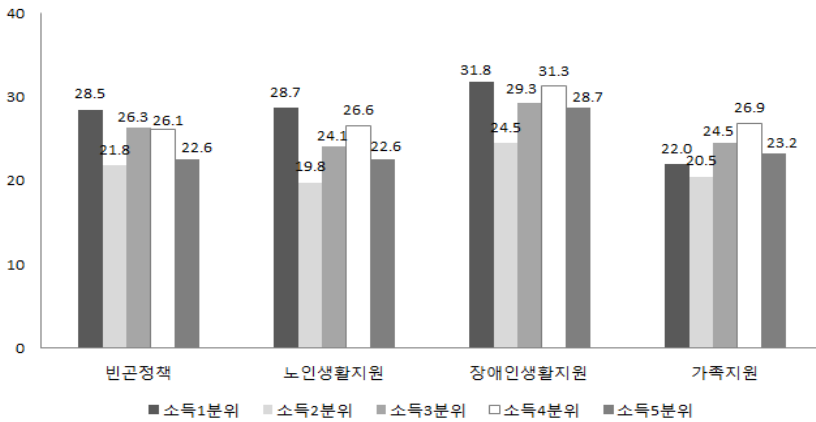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계층 간 뭉프현상의 차이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 1분위’ 집단의 뭉프현상 규모는 건강정책, 연금, 빈곤정책, 노인과 장애인 생활지원에서 높게 관찰되고 있다.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므로, 복지제도의 급여 가능성과 급여수준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낮은 수준의 뭉프현상이 포착될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된 결과이다. 저소득층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비판하지만, 정부와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과 재분배 정책을 향한 냉소적 시각도 함께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Derks, 2004: 516-517). 아니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다른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불안정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지지적 입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낮은 경제력으로 인한 취약한 조세부담 능력은 증세를 부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 1분

16) 선별적 복지가 중심이 되어 일부 구성원만 복지혜택의 대상으로 선정하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 전체 구성원을 주요 복지제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복지혜택 여부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분열될 수 있다(Giddens, 2000: 174-175). 그로 인해 고소득층은 복지(비)를 낭비로 인식하게 되고 중산층은 복지 수혜자들과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복지국가는 다수의 구성원에게 외면 받게 된다(Bauman, 2000: 9).

위'에서 보여지는 높은 수준의 높프현상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세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낮은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계층 간 높프현상의 차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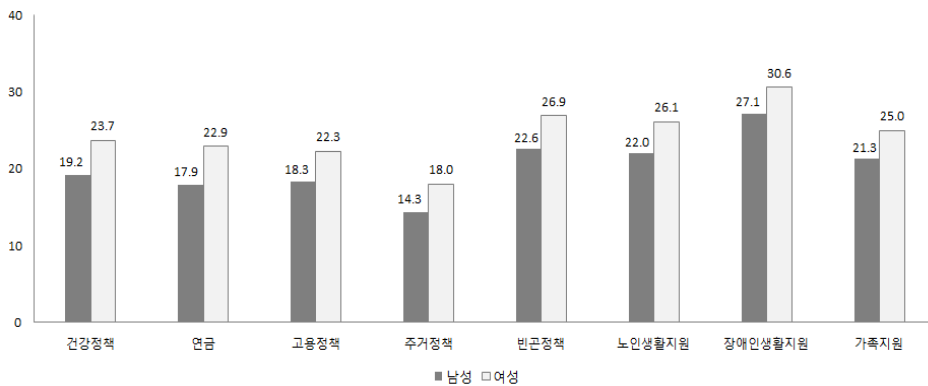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계층 간 높프현상의 차이 2

이러한 해석은 '소득 2분위'의 낮은 높프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동시에, 비용부담에 대한 공유의식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용에 대한 부담능력이 1분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 3분위의 높프현상 규모는 높은 편이며, 4~5분위의 규모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에서 연금에 대한 높프현상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다.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가 약한 연금제도의 특성(Boskin, 1986; 김태성·성경룡, 2010: 159 재인용)과, 성숙된 연금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준비와 수익성 증진에 대한 기대가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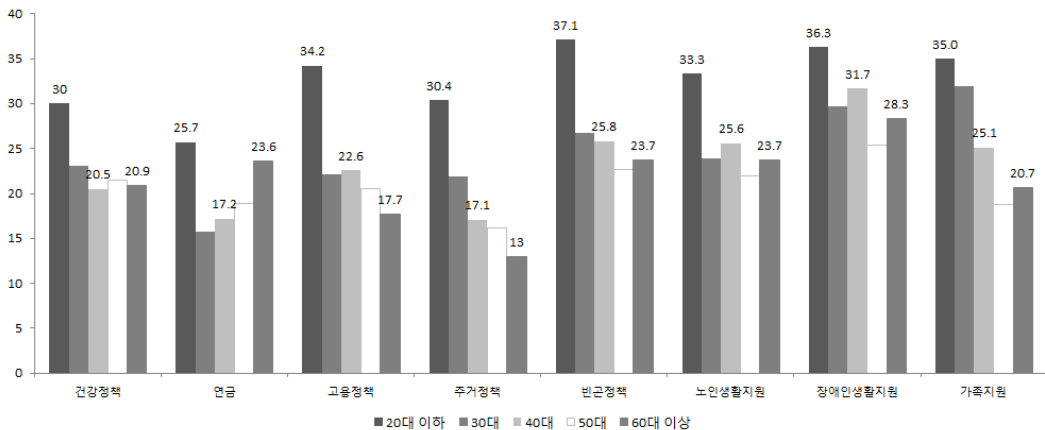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4>에 따르면, 모든 복지제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높프현상 규모가 더 높게 관찰되어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김사현, 2015). 특히 연금은 젠더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 연금 수급권에 존재하는 젠더격차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권을 인정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젠더 차별적 요소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빈번한 경력단절 등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석재은, 2012: 114-115).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당연 가입자를 결정하는 등의 젠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강성호·김영옥, 2012: 52-59). 국민연금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차별적 속성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강성호·김영옥, 2012; 우해봉·한정림, 2014; 유희원·이주환·김성옥, 2015).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생애 주기별 차별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노후빈곤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 노인빈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연금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젠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김수완, 2008: 149). 연금제도의 확대가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도 확대를 위한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연금에 대한 높프현상의 높은 젠더 격차를 야기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젠더 간 높프현상의 차이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연령집단 간 높프현상 규모를 비교한 <그림 5>에서는 '20대 이하'의 높은 높프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고용정책과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정책

에 대한 높은 수치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실업율은 이미 두 자리 수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실업율과의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예,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로 전략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기득권층과 기성세대를 위한 경제정책과 고용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복지확대와 증세에 관한 청년층의 냉소적인 태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5〉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연령 집단 간 높프현상의 차이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높프현상이 관찰되어, 낙후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의 미래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가족지원에 대한 '30대'의 높은 높프현상도 특이한 현상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연령대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사실은 보육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육문제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상보육 논의가 촉발되었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자의 80%는 여전히 추가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알력이 심화되면서 제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책확대를 위한 증세에 높은 저항이 포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고용정책의 높프현상은 해당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인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고령화로 인해 높아진 노인들의 근로욕구가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주요 복지제도의 뚝뚝현상 발생에 대한 영향 요인

주요 복지제도의 뚝뚝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분석의 주요 변수인 계층, 젠더, 연령 변수는 대체로 모든 제도의 뚝뚝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복지적 성향이 강하며(김영란, 1995),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425). 그러나 증세에 관한 의견을 포괄하는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어(김사현, 2015), 일반적인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 청년 등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 집단이다.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경험하고,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빈곤 위험집단과 청년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삶의 과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뚝뚝현상으로 발현되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빈곤정책에 대한 이들 집단의 부정적인 인식은 고소득층의 사회부조에 대한 지지 확률이 낮다는 일반적 인식(Cook and Barrett, 1992)과 상반된 결과이다. 바우만(Bauman: 2013: 128-130)은 빈곤층에 대한 인식이 동정과 인정을 베풀 대상에서 반감과 분노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직면한 위험하고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찾고 있다.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며 생활하는 이들은,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적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을 누리고 있는 부정적인 존재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연대와 공동체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에 대한 강조로 전환되며, '대의명분', '공공의 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형성된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Bauman, 2009: 59). 특히 청년층은 연대와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인화가 급속히 진행된 사회에 대한 체감이 높은 세대이자 IMF 이후 가장 심각한 청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안정성이 부재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경험하는 이들은, 빈곤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제도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기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며, 재원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태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여가 전제되지 않은 급여체제로 구성된 부조방식의 특성 상 재원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평가절하된 상황적 요인이 빈곤정책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한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서 계층 변수의 유의미성이 부각되지 않는 원인은 보편적 무상보육의 긍정적인 효

과로 추정할 수 있다.

수급여부는 건강정책과 연금,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에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급여와 혜택을 경험한 이들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Hasenfeld and Rafferty, 1989). 그러나 고용, 주거, 빈곤정책, 가족지원에서는 수급여부가 님프현상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 완화의 체감도를 감소시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정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관련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제약되어 있어, 낮은 정책 접근성의 한계가 변수 설명의 무의미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 가족지원에서는 무상보육 시행으로 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과 무상보육의 축소 또는 파기 논란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복지체감 수준도 연금과 고용정책을 제외한 모든 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님프현상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조세공평성과 님프현상 발생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님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결과는 연금과 가족지원에서만 관찰된다. 사회·구조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연금과 보육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무상보육은 선거의 핵심 복지 이슈로 등장하며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운영 미숙에 따른 연금 손실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 등 다양한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보육정책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보육지원에 대한 책임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구성원은 관련 제도에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세가 급여의 확대를 담보하지 않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고용정책, 빈곤정책,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는 조세공평성을 '보통'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님프현상 발생 가능성이 '불신'하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결과를 발표한 김사현(2015)의 연구는 조세체계가 불공정하다는 평가만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조세체계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 세금은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용회피가 조세공평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공평성에 대한 평가는 성실한 납세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에 대한 불공정한 인식은 납세 회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orciano, 1984). 조세공평성을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제도적 요인이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지 또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탈세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공정한 납세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심석무, 1999). 자료상의 한계로 확증은 어렵지만, 개인 차원에서 조세회피 행위를 시도하여 조세공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

화되었다면, 증세에 대한 저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인위적인 조세회피 행위가 조세 공평성에 대한 평가의 증세 저항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에 대한 납부현상의 영향요인

변수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계층 (1분위)																
2분위	-.375	.123	9.238**	.687	-.440	.120	13.338***	.644	-.187	.129	2.092	.830	-.420	.142	8.533**	.657
3분위	-.228	.131	3.045	.796	-.372	.131	8.083**	.689	-.058	.136	.178	.944	-.273	.149	3.343	.761
4분위	-.398	.138	8.268*	.672	-.395	.138	8.214**	.674	-.280	.145	3.748	.755	-.542	.160	11.515**	.582
5분위	-.491	.142	11.996**	.612	-.528	.143	13.690***	.590	-.336	.148	5.201*	.714	-.606	.162	13.917***	.546
젠더 (남성)	.264	.079	11.201**	1.302	.264	.080	10.752**	1.302	.243	.080	9.146**	1.275	.273	.089	9.495**	1.314
연령 (20대 이하)																
30대	-.367	.179	4.196*	.693	-.620	.195	10.173**	.538	-.584	.176	11.035**	.557	-.437	.180	5.878**	.646
40대	-.472	.169	7.747**	.624	-.485	.178	7.395**	.616	-.528	.163	10.448**	.590	-.695	.173	16.136***	.499
50대	-.390	.172	5.126*	.677	-.379	.180	4.426*	.685	-.669	.169	15.691***	.512	-.764	.179	18.302***	.466
60대	-.495	.167	8.773**	.610	-.218	.172	1.602	.804	-.948	.165	33.150***	.387	-1.143	.176	42.335***	.319
조세공평성 (불신)																
보통	.127	.140	.825	1.135	.112	.141	.625	1.118	.292	.138	4.504*	1.340	.286	.151	3.602	1.331
신뢰	-.199	.208	.913	.820	-.494	.231	4.588**	.610	-.002	.201	.000	.998	.224	.208	1.163	1.252
복지체감	-.238	.071	11.235**	.788	-.098	.073	1.819	.907	-.033	.072	.204	.968	-.262	.079	10.929**	.769
수급여부 (수급자)	.317	.157	4.094*	1.373	.313	.155	4.077*	1.368	.249	.160	2.423	1.283	.006	.166	.001	1.006
상수	-.281	.306	.839**	.755	-.815	.313	6.793**	.442	-.770	.311	6.110*	.463	.147	.331	.196	1.158
Nagelkerke R ²	.020				.026				.023				.041			
X ²	52.950***				68.432***				60.465***				99.795***			
-2LL	4,252.737				4,133.453				4,117.19				3,566.011			

주: *p < .05, ** p < .01, *** p < .001, ()는 해당변수의 기준범주임
 B: Beta; S.E.: Standard error, -2LL: -2 log likelihood; Exp(B): odds ratio

<표 5> 빈곤정책,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가족지원에 대한 님프현상 발생의 영향요인

변수	빈곤정책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가족지원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계층 (1분위)																
2분위	-.393	.118	11.047**	.675	-.544	.120	20.622***	.580	-.398	.114	12.252***	.672	-.166	.124	1.787	.847
3분위	-.277	.126	4.831*	.758	-.386	.127	9.255**	.680	-.234	.121	3.755	.791	-.098	.133	.546	.907
4분위	-.329	.132	6.217*	.720	-.291	.131	4.932*	.748	-.175	.125	1.947	.840	-.014	.137	.010	.987
5분위	-.541	.137	15.594***	.582	-.522	.136	14.696***	.594	-.297	.129	5.316*	.743	-.225	.142	2.537	.798
젠더 (남성)	.219	.075	8.531**	1.245	.207	.075	7.508**	1.230	.172	.071	5.871*	1.188	.225	.077	8.554**	1.252
연령 (20대 이하)																
30대	-.470	.170	7.585**	.625	-.476	.175	7.408**	.621	-.293	.169	3.025	.746	-.123	.168	.535	.884
40대	-.477	.160	8.882**	.621	-.359	.162	4.896*	.698	-.165	.158	1.088	.848	-.435	.162	7.257**	.647
50대	-.618	.165	13.966***	.539	-.532	.168	10.006**	.587	-.423	.163	6.710*	.655	-.747	.170	19.323***	.474
60대	-.645	.159	16.428***	.525	-.493	.162	9.312**	.610	-.273	.157	3.022	.761	-.620	.161	14.786***	.538
조세공평성 (불신)																
보통	.581	.126	21.370***	1.787	.172	.133	1.660	1.188	.496	.123	16.369***	1.643	-.455	.130	12.300***	1.576
신뢰	.235	.180	1.703	1.266	-.191	.198	.924	.826	-.080	.183	.192	.923	.060	.192	.097	1.062
복지제감	-.261	.068	14.785***	.770	-.196	.068	8.205**	.822	-.237	.065	13.418***	.789	-.213	.069	9.453**	.808
수급여부 (수급자)	.037	.142	.069	1.038	.298	.150	3.960*	1.348	.283	.142	3.943*	1.326	.238	.156	2.327	1.269
상수	.336	.289	1.349	1.399	-.153	.295	.268	.858	-.080	.282	.080	.924	-.327	.301	1.179	.721
Nagelkerke R ²	.030				.022				.023				.032			
X ²	84.658***				59.999***				65.621***				88.685***			
-2LL	4,547.255				4,504.93				4,895.23				4,385.74			

주: * p < .05, ** p < .01, *** p < .001, ()는 해당변수의 기준범주임
 B: Beta; S.E.: Standard error, -2LL: -2 log likelihood; Exp(B): odds ratio

5. 결론

제한된 자원 배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는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수급자와 비수급자, 워킹맘과 전업주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세분화된 집단 사이의 갈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주요 복지제도의 개편과정을 관류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잠식하고 있다. 연대는 갈등으로, 공동체 의식은 개인화로 대체된 현실은 복지확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는 고사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의 분열을 야기하며,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관되지 않은 복지태도인 '눔프현상'으로 발현되어, 복지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세는 반대하는 '눔프현상'이 우리 사회에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계층, 젠더, 연령에 따른 주요 복지제도의 님프현상 규모와 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하는 불평등 기제가 님프현상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

하였다. 복지제도가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증세에 대한 구성원의 지지적인 견해로 형성된 일관된 복지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제도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내재되었다는 사실은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복지제도 존립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일관된 복지태도 형성을 방해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부추이고 심지어 조장하며 복지확대의 장애요인인 늪프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늪프현상 완화와 복지확대 현실화를 위한 단초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주요 복지제도의 개편과정과 각종 선거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며 계층, 젠더, 연령 간 첨예한 갈등이 목도된 현실에서, 연대와 공동체 의식만을 강조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쉽지 않다. 이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제도 확대에 필수적인 빈곤정책의 높은 늪프현상을 통해서 반증되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급여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에서 나타난 낮은 수준의 늪프현상을 근거로, 증세를 통한 복지제도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될 경우 늪프현상의 심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지급여의 대상이 된다면, 구성원들의 복지체감 수준이 증대되어 늪프현상 완화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친복지 진영의 우군이 증대되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무상급식 논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이슈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지 제공 방식의 차별화된 이념논쟁에 경도되어 정작 보편적 복지제도의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 최근 성남시에서 '사회적 지분급여' 방식의 '청년배당'을 제안하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확대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늪프현상 규모가 가장 크게 발견된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제도에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운영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불평등 요인은 늪프현상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은 계층, 젠더 간 불평등 완화라는 일차원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늪프현상 완화와도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젠더 측면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저급한 노동시장 조건과 무급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에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넘어서 접근이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증세는 복지제도 확대에 필연적인 전제이다. 복지 재원을 형성하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도 복지국가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Svallfors, 2012: 3). 복지태도에 반영된 증세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 수준은 복지확대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관된 복지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복지 발전에 관한 전망은 비관적임을 시사한다. 늪프현상이 지속되는 한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이상향에 불과하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주요 가치가 변화된 현 시점에서 연대와 공동체 의식만을 강조하며,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확대에 대한 구성원의 일관된 복지태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구성원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생산적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 늪프현상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자리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에 비해 학문적 접근이 부족한 늪프현상에 관한 연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추정된 결과를 정확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현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발생의 원인을 심층적인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늪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현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신뢰성 확립과 정당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복지확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契경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김영옥, 2012, “국민연금 수급률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여성경제연구』, 9(1): 49-76.
- 국립국어원, 2014, 『2014년 신어』.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 27-57.
- 김상균, 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 『사회과학과정책연구』, 16(1): 121-167.
- 김상호, 2007, “공적연금제도와 세대 간 갈등”, 『분쟁해결연구』, 5(1): 37-53.
- 김수완, 2008, “여성 사회권 관점에 의한 한국 연금개혁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24(3): 147-176.
- 김수정, 2014,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25(1): 63-91.
- 김연명, 2013,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의정연구』, 19(2): 293-301.
- 김연명·김승욱 역,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Gough, I.,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s*,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순, 1996, 『복지국가 위기과 재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윤태·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태도”, 『동향과전망』, 90: 331-378.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태성·성경륜, 201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김희연·이재광·최석현·최영기, 2013, “복지의 새로운 영역, ‘사회적경제’”, 『이슈&진단』, 100: 1-21.
- 노대명·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1-1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연규·황정임, 2008,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급여 적절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2): 73-112.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모지환·김행열,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동북아연구소』, 24(1): 179-199.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찬웅, 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출판사.
- 박형신, 2012, “한국 보수 정권 복지정책의 감정 동학”, 『사회와이론』, 20: 225-264.
- 배진희·신정관, 2014, “복지의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125-160.
- 석재은, 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 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95-144.
-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 - 사회계층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 신윤정·정경희·김수봉·손창균·이수형·이지혜, 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석무, 1999,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에 따른 성실납세의지 분석”, 『회계정보연구』, 12: 215-233.
- 안상훈, 2000, “복지정책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1): 211-227.
- 양재진·민효상, 2013, “한국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전망』, 88호: 48-96.
- 우아영, 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혜봉·한정림, 2014,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98, '07)의 성별 영향 비교 분석”, 『한국보험학회』, 99: 121-154.
- 유희원·이주환·김성욱, 2015,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2015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충북 오송, 2015년 10월 16일.
- 윤성이·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3): 271-292.
- 윤찬영, 2010, “무상급식 논쟁. 선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복지동향』, 68-70.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19(3): 37-83.
-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 이하나·이미라,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장귀연, 2013,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마르크스주의연구』, 10(3): 12-40.
- 전준구, 2006,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고객만족, 후속행동과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2): 105-139.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최진욱, 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97-117.
- 한상진·박찬욱 역, 2000, 『제3의 길』, Giddens, M.,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서울: 생각의 나무.
- 함철호·이중섭, 2010, “지역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자기이해, 사회화, 이데올로기, 수급자에 대한 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99-325.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넉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통권 제 483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통권 제 250호)
- 홍지수 역,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서울: 봄아필.
- 황아란, 2009, “정치세대와 이념성향: 민주화 성취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2): 123-151.
- Alesina, A., and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465-490.
- Bauman, Z., 2000, “Am I my brother’s keep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3(1): 5-11.
- Bergman, M., 2002, “Who pays for social policy? A study on taxes and trust”,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89-305.
- Blekesaune, M., and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noli, G., 2010, “Public attitudes to social protection and political economy traditions in Western Europe”, *European Societies*, 2(4): 431-452.
- Boskin, M. J., 1986, *Too Many Promise: The Uncertain Future of Social Security*, Homewood, IL: Dow Jones-Irwin.
- Cook, F., and Barrett, E., 1992, “Beliefs about recipients deservingness and program effectiveness as explanations of support”, In *Support for the American Welfare State: Views of Congress and the Public*, pp. 95-14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rks, A., 2004,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Flande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 509-521.
- Duncan, A., and Jones, A., 2003, *Economic Incentives and Tax Hypothecation*, CPE Working Paper 2/04, York: CPE.
- Erikson, R. S., and Tedin, K. L.,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7th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 Ferrera, M., 2010, “The South European Countr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Francis, G. C., Oxford University Press.
- Hasenfeld, Y., and Rafferty, J.,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ochberg, J., 1956, "Perception: Toward the recovery of a definition", *Psychological Review*, 63(6): 400-405.
- Immergut, E. M., 1998, "The theoretical core of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5-34.
- Marshall, T. H., 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 London: Heinemann.
- Martin, I. W., and Gabay, N., 2012, "Fiscal protest in thirteen welfare states", *Socio-Economic Review*, 1-24.
- Porcano, T. M., 1984,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59(4): 619-636.
- Rimlinger, G. V.,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York: Wiley.
- Svallfors, S., 1991, "The politics of welfare policy in Sweden: Structural determinants and attitudinal cleavag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4): 609-634.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1): 53-74.
-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19-138.
- Svallfors, S., 2012, *Contested Welfare States. Welfare Attitudes in Europe and Beyon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illey, J., and Evans, G., 2014, "Aging and generational effects on vote choice: Combining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to estimate APC effects", *Electoral Studies*, 33: 19-27.
- Titmuss, R., 1976, *Essays on the Welfare State*. George Allen & Unwin.
- Welch, S., 1985, "The more for less" paradox: Public attitudes on taxing and spen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49: 310-316.
- Wright, E. O., 1985, *Class*. London: Verso.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and NOOMP

Kim, Kyo Seong
(Chung-Ang University)

Kim, Yun Min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the NOOMP(Not Out of My Pocket) phenomenon, the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for an expansion of welfare system and increase of financial resources. By analyzing the scale and influential factors of the NOOMP to the main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class, gender, and age group, the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OMP and the inherent stratification structure of each programs. This paper uses the Additional Survey of Welfare Attitude in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As a result of analysis, low level of NOOMP phenomenon has been observed in welfare programs for whole society members such as health policies, pension, employment policies, compared to those of targeted programs for the poor, aged, or disabled. In addition, high probability of each group of 'low incomer', 'female', and '20s or less'to the NOOMP phenomenon has been appeared, therefore, high relevance of the NOOMP and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welfare programs have been confirm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ransition to the universal welfare programs and the improvement of welfare programs for more equal structure are needed to reduce the NOOMP phenomenon.

Key words: welfare attitude, NOOMP(Not Out of My Pocket),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stratification by the welfare programs

[논문 접수일 : 16. 01. 12, 심사일 : 16. 04. 12, 게재 확정일 : 16. 04. 24]